

<별첨>

정책질의서

각 해당 문항에 대해 1), 2)중 하나를 선택하여 () 기입해주시고 그 구체적인 이유나 의견을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각종 여론조사상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에 대한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정치인의 부정부패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독자적인 [부패방지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1)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부패방지법]의 원안대로 <내부자고발>를 철저히 보호하는 법안으로 부패방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 2) 부패방지법의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내부고발자보호> 문제는 신중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시민단체들이 부패방지법을 청원하기까지 이른 이나라의 정치현실이 답답하고 국민들이 가장 큰 불신의 대상으로 꼽고 있는 인사들이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내부자 고발을 철저히 보호하는 법안으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서해안의 간척사업은 경기도의 시화호 오염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갯벌 보전의 여론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많은 반대의견과 제 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귀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1) 새만금간척사업은 즉시 중지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국민의 여론을 모아 계획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계속진행되어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정부의 환경정책 실패는 시화호 하나로 충분하며 환경단체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고수하려는 정부는 각성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한번 파괴된 갯벌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갯벌보존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많은 논의와 실천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은 매우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귀하께서는 지구당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직선거 출마자 내천, 공천에서 여성후보의 비율을 30%이상 보장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실적으로 인물의 부족과 지구당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각종 의원의 내천, 공천에서 여성후보를 30%이상 공천하겠습니다.(○)

2) 인물의 부족과 지구당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여성후보의 30% 이상 공천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후보의 30%공천보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여성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여성의 가장 큰 적인 여성이라는 사회통념을 혁파할수 있다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4. 우리나라는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평균 45.9시간, 세계8위)과 세계최고수준의 산업재해들,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IMF이후 장기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노동시간의 단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노동시간의 단축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외환위기이후 장기실직자의 증가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라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이 사치스러운 논쟁일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은 필수적이며 급진적인 단축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5. 우리는 오랜 군사정권하에서 인권침해국,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권신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인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 설치를 두고 정부는 법인적 성격의 민간기구로, 인권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 정부의 인권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법무부의 산하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상의 국가적 인권침해가 가능한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인권위원회는 기존 국가기관의 인권보장기능에 허점이 있는 부분, 즉 ‘틈새’를 보충하기 위한 기구이며 인권보장에 관한 제1차적·최종적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고, 이를 감시·보충하는 책임만 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를 할 인권위원회를 민간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지구상의 그 무엇도 인간의 권리위에 존재할수 없으며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권위원회 설치를 기정 사실화 하는 입장에서 책임과 권한유무를 떠나 인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할 것이며 그 대안으로 사실상의 국가적 인권침해가 가능한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개념의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고교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지역

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지역은 고교입시 비평준화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경기도내 고교 입시 평준화지역의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합니다.(○)
- 2) 반대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우리 사회의 교육문화는 오로지 일류와 일등만을 고집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펼침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등한시되어 왔습니다. 현실적인 교육시스템은 좋지만 실질적인 자질향상 도모와 인성교육위주의 차원에서 고교입시평준화 지역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심의기구가 바람직합니다.(○)
- 2) 자문기구가 바람직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기구로써 비공개적이고 교육관리자의 가치관에 따라 운영된다면 존재의 의미가 축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창의적인 운영의 공개화와 함께 교육관리자의 인식 변환에 따른 자율운영이 뒷받침되는 심의기구로써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국민들은 이번 여야 공천과정이 지구당내에서의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보스중심의 밀실, 정실공천으로 귀결되었다며 공천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만약 당선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의 후보공천자(추천자)를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지구당내의 경선(예비선거를 포함한)을 통해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합니다.(○)

2) 반대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한국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될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가 계파정치와 보스정치라고 봅니다. 특히 1인 보스체제 아래의 현 정치구조가 의식있고 신념있는 신인 정치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은 진정한 정치개혁이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후보공천자의 지구당내 경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한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르되 외국군대가 주둔한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한미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 현재 SOFA는 미군범죄의 수사권, 기지 사용료 부담, 환경권등의 거의 모든 조항에서 불평등한 협정이므로 곧바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2) 분단현실에서 한미간의 공조협력체계가 필요하므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

* 구체적인 사유는 ? 분단현실에서 한미간의 공조협력 차원에서 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중에서 미군범죄의 수사권은 상당부분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매번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부문부터 저진적인 개정을 이룸으로써 불평등한 SOFA협정과 관련한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국가보안법은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과 부적정성에 의해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왔고 수사과정에서도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의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당연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현실을 볼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지난 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분단국가 현실을 가만 할 때 우리나라의 체제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공헌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역사적 흐름이 변모하고 있는 이때 국가보안법의 전면개정 또는 폐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안보의식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적인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 현 지방자치법(99년 8월 31일 개정)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결과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1994년에 도입된 주민투표제는 명목상 조항으로만 남아있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법화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는 주민투표의 발의여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이며 주민투표의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문적 주민의견 조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참여에 의한 행정의 민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투표제가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 구체적인 사유는 ? 본격적인 지자체 실시가 10여년을 맞고 있는 현재 중앙정부의 일방적 하달식 행정이 진정한 지방자치정착을 요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에 의한 감사청구권, 조례입법 청원권이 입법화 되면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에 도입된 주민투표제가 구체적인 입법화 없이 명목상 조항의 자문적 주민의견 조사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이 민

주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주민투표제가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2. 현재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지난 2월 9일 통과된 개정된 선거법이 87조의 부분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운동을 가로막고 유권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총선시민연대에서는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가로막는 선거법 58조, 254조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사실상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2)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O)

* 구체적인 사유는 ? 이번 16대 총선은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보장 측면에서 우리 정치사의 개혁을 이룰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더구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명단자 발표는 우리 사회에 충격과 파문을 몰고 왔고 당사자들의 거센 항의속에서도 시민단체의 지속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에 많은 단체의 낙천,낙선 명단 발표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성숙한 유권자들은 시민단체들의 단호한 의지를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13.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 전체수입곡물의 10% 이상이 유전자 조작식품종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는 일차적으로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표시제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는 표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O)

2)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에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해도 늦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유전자 조작식품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란을 연구로 인해 이들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는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며 유전자 조작식품의 구입여부는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입니다.

14. 올해 초 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구성되어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사이에 선수협 의회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있습니다. 입후보예정자는 프로야구선수협 의회의 결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1) 프로야구선수협의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프로야구 구단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O)

2) 현재 프로야구 구단들의 재정상태나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부 선수들의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구성은 성급한 일입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각구단들이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결성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선수들의 자유계약의지를 가로막고 발목을 잡기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보며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인사들의 무모한 발언과 획일적인 사고가 있는 한 프로야구계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프로야구 선수협의회는 선수개개인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것이지 어떠한 압력단체로써 만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 귀하가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입법활동과정에서 당론과 개인적 의견이 배치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1) 개인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O)

2) 당론에 따르겠습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라면 그 정당의 정치이념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고 보지만 본인은 개인의 안녕과 입신출세를 위해 자신의 소신

을 접는 정치인이기보다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주관과 대안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한순간 자리에 연연해 소신을 저버리기보다는 숨겨진 작은 아픔까지도 감싸안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16. 마지막으로 귀하는 경기도내의 가장 큰 현안 내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종합하여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기도는 전국 기업체의 1/4가량인 2만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소재하고 있고 연구소, 교육기관, 경제활동 인구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 총예산규모(전국 2위 약 59조원)나 금융시장, 산업기술인력확보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2천 2백만명을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배후 소비시장이며 공항 및 항만의 접근이 용이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잘 발달되어 기업의 투자입지 여건이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절반정도인 2천2백만명이 모여 살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해 교통, 주택, 환경등 각종 도시문제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과도한 토지이용규제, 급격한 인구증가와 급증하는 행정부담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주변지역의 도시문제가 심화 되고 있으며 그외의 토지이용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이북지역과 경기도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지도록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감과 인프라시설의 수준등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신도시등 도시공간의 확대에 대응하는 교통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고유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현안중심의 시책들을 우선순위를 감안해 추진해야할 것입니다.